

12-36 (통권 제 507호)

2012. 10. 05.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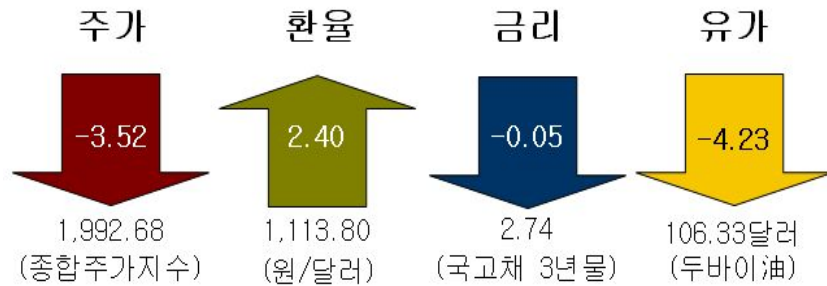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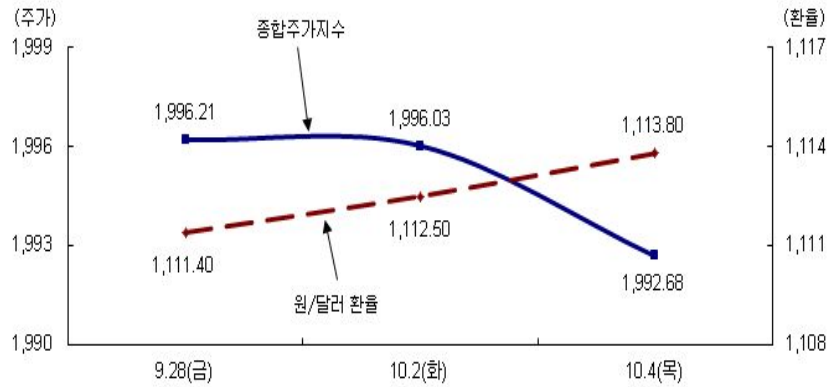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지수경기는 디플레이션,
체감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28~10.4)



차 례

| | |
|------------------------------|----|
| 주요 경제 현안 | 1 |
| □ 지수경기는 디플레이션, 체감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 | 1 |
|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19 |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이 준 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 지수경기는 디플레이션, 체감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

■ 지수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가 상당하다. 지수물가(소비자물가)는 8월에 1.2% 상승에 머물렀고, 통계청이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생활물가도 0.6% 상승에 그쳤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5.0%에 달했다.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는 지수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로 이어지고 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수경기는 GDP 증가율이 떨어지고 물가상승률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특성을 띠고 있다. 반면 국민들은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응답이 84.5%에 이르러, 체감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체감물가와 체감경기의 특징

(특징1) 체감물가가 지수물가보다 4배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수물가(소비자물가)는 8월에 1.2% 상승한 반면,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5.0%에 이르렀다. 또한 물가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93.1%에 달해 물가 불안 심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징2)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체감물가 상승률도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9.9%이고, 소득 200~400만원 미만은 5.1%, 400~600만원 미만은 4.9%,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4.8%이다. 한편 적자가구의 체감물가가 흑자가구보다 크게 상승하고 있다. 가계지출이 가계소득보다 많은 적자가구의 체감물가는 8월에 6.4% 상승하여, 흑자가구(소득>지출)의 4.8%, 균형가구(소득=지출)의 4.8%보다 높다. 소득수준보다는 가계수지 흑자 여부가 체감물가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징3)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체감물가 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자영업자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5.2%로 전체 평균인 5.0%보다 높다. 음식점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재료가 상승하면서 체감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업주부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4.8%를 기록하였다. 전업주부는 상대적으로 물가 관련 정보가 많아 지수물가와 괴리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징4) 연령이 높을수록 체감물가 상승률도 높다. 20대, 30대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각각 4.4%, 4.8%인 반면, 40대는 5.3%, 50대 이상은 5.2%를 기록하였다. 40~50대의 경우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많아 체감물가가 높게 형성되고, 60대 이상 고령층은 소득이 적어 체감물가가 높게 느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징5) 지역별로 체감물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과 대전충청 지역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각각 5.3%, 5.4%로 높은 반면, 광주전라 지역과 인천경기 지역은 각각 4.5%, 4.8%로 낮은 수준이다.

(특징6)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큰 생활밀착품목 중에서도 식료품과 승용차 연료, 전기·가스·난방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다는 응답이 많았다. 식료품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다는 응답자는 51.4%였고, 휘발유 등 승용차 연료는 20.4%, 전기·가스·난방은 14.6%였다. 반면 대중교통비(2.1%), 교육비(3.5%), 외식비(3.6%), 전월세(4.4%)라고 답한 응답자는 적었다.

(특징7) 체감물가의 파급영향을 보면, 적자가구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물가로 인한 생계부담이 크고 소비 위축도 심각한 수준이다. '물가 때문에 생계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자는 적자가구의 88.7%, 흑자가구의 69.2%였고 저소득층(200만원 미만)은 84.4%, 고소득층(600만원 이상)은 68.2%였다. '물가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응답은 적자가구의 82.1%, 흑자가구의 62.7%, 저소득층의 78.1%, 고소득층의 60.5%였다.

■ 시사점과 정책 과제

(시사점)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는 실제 경기와 체감 경기의 괴리로 이어져 정부의 통화정책 수단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체감물가 상승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체감물가의 수준 및 추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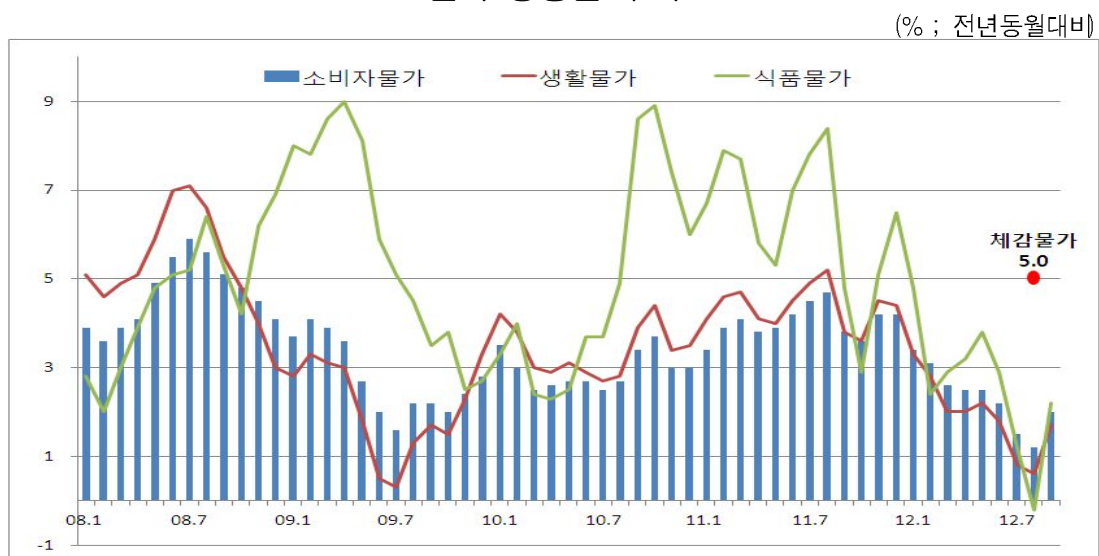
(정책 과제)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체감물가를 낮추는 정부 대책으로 유통구조 효율화(46.5%)를 가장 선호하고, 체감물가지수를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26.7%에 달했다. 식료품가격을 품목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5%, 기준금리 인상은 6.0%였다.

따라서 정부는 첫째, 유통구조 효율화 및 정부비축 시스템 정비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둘째,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 수준과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체감물가지수를 개발하여, 통계청의 생활물가지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석 후 국제곡물가격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공산품 및 서비스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것을 미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I. 지수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 지수물가(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에 1.2%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체감물가 상승률은 5.0%에 달해 괴리가 매우 큼
 - 지수물가를 대표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에 전년동기대비 1.2%에 머물러 매우 안정되어 있음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4.0%에 달했으나, 2012년 1월 3%대로 떨어진 이후 6월 2.2%, 7월 1.5%, 8월 1.2%, 9월 2.0%로 매우 낮은 수준 유지
 - 특히 정부가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1998년에 도입한 생활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체감물가 지수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2011년 생활물가 상승률은 4.4%에 달했으나, 2012년 2월 2.8%, 6월 1.8%, 7월 0.8%, 8월 0.6%, 9월 1.7%에 머물름
 - 특히 최근의 몇몇 농산물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식품물가 증가율은 7월 1.2%, 8월 -0.2%, 9월 2.2%를 기록하여 체감물가와 괴리가 심각한 수준
 - 체감물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신선식품물가도 지표상으로는 안정세 지속
 - 신선식품물가 상승률은 2010년 21.7%, 2011년 7.1%에 달했으나, 2012년 7월 들어 전년동월대비 3.0%로 안정되고 8월에는 -2.9%를 기록
 - 다만 9월에는 연이은 태풍으로 8.6% 상승하였으나, 10월 이후 안정될 전망

< 물가 상승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 하지만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이상 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매우 높은 수준
 - 연이은 가뭄과 태풍으로 8월 고춧가루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52.8%나 올랐으며, 파는 49.4%, 양파는 24.2% 상승
 - 시내버스료와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비는 각각 10.3%, 9.8%, 19.4% 올랐으며, 전기료도 2.1% 상승
-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의 체감물가는 8월에 5.0%나 상승하여, 지수물가 상승률 1.2%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는 지수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로 이어지고 있음

-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수경기는 GDP 증가율이 떨어지고 물가상승률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특성을 띠고 있음
 - 반면 국민들은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응답이 84.5%에 이르러, 체감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참고> 체감물가와 지수물가

- **체감물가** : 소비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주관적인 물가
- **지수물가** : 소비자가 구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측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수로서, ‘소비자물가지수’를 뜻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조사품목은 모두 481개 상품 및 서비스로서, 월평균 소비지출액 비중이 지출 총액의 10,000 분의 1(월평균 212원) 이상인 품목
- **생활물가** : 통계청이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1998년에 도입한 물가지수
 -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2개 품목으로 작성되며, ‘식품’과 ‘식품이외’로 구분됨
- **신선식품지수** : 신선 채소, 과일, 어개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 가격 변동이 클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자주 구입하기 때문에 체감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큼

II. 체감물가와 체감경기의 특징1)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 설문조사 개요

-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체감물가와 지수물가의 괴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음
- 조사 기간은 2012년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일주일간이었고, 유선전화 설문으로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3.08%p임
- 설문조사 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 응답자 특성 : 총 1,013명

< 응답자 특성 >

| 응답자 특성 | | 비중 | 응답자 특성 | | 비중 | |
|--------|-----------|------|-------------|-----------|--------------|------|
| 성별 | 남성 | 50.3 | 직업별 | 정규직 근로자 | 37.6 | |
| | 여성 | 49.7 | | 비정규직 근로자 | 13.3 | |
| 연령별 | 20대 | 22.6 | | 자영업자 | 17.3 | |
| | 30대 | 26.2 | | 주부 | 18.1 | |
| | 40대 | 26.5 | | 기타(무직 포함) | 13.7 | |
| | 50대이상 | 24.8 | | 200만원 미만 | 13.4 | |
| 지역별 | 서울 | 20.5 | | 소득 수준별 | 200~400만원 미만 | 41.9 |
| | 인천·경기 | 26.9 | | | 400~600만원 미만 | 31.6 |
| | 대전·충청 | 10.2 | | | 600만원 이상 | 13.2 |
| | 광주·전라 | 10.7 | | 가계 수지 | 적자가구(소득<지출) | 28.0 |
| | 부산·울산·경남 | 16.1 | 흑자가구(소득>지출) | | 27.7 | |
| | 대구·경북 | 11.2 | 균형가구(소득=지출) | | 44.2 | |
| | 기타(강원·제주) | 4.5 | | | | |
| | | | 전체 | 1,013명 | 100% | |

1) 체감물가와 지수물가의 괴리 배경은 <별첨2> 참조

2. 체감물가와 체감경기의 특징

1) 물가 불안 심리와 체감물가

○ (특징1)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 심리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하향 안정화 되어 있는 지수물가와 상당한 괴리 존재

- 전체 : 최근 물가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93.1%에 달하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6.5%에 불과
 - “최근 물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불안하다’는 42.6%, ‘불안한 편이다’는 50.5%로 대부분을 차지
 - 반면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0.6%, ‘안정되어 있는 편이다’는 5.9%에 불과
- 소득수준별 :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물가 불안 심리가 약하기는 하나, 고소득층의 불안 심리도 상당한 수준
 - 가구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 중에서도 물가가 불안하다는 응답자가 87.6%에 달함
- 성별·연령별·지역별·직업별 : 물가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로 큰 차이 없이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90% 전후임
 - 물가 불안 심리가 비단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주부 등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반영

< 최근 물가에 대한 인식 >

| 소득수준별 | 매우 안정 | 안정된 편 | 매우 불안 | 불안한 편 |
|--------------|-------|-------|-------|-------|
| 200만원 미만 | 2.3 | 6.3 | 42.2 | 48.4 |
| 200~400만원 미만 | 0.2 | 4.5 | 44.8 | 50.2 |
| 400~600만원 미만 | 0.3 | 5.7 | 45.0 | 48.3 |
| 600만원 이상 | 0.8 | 11.6 | 37.2 | 50.4 |
| 전체 | 0.6 | 5.9 | 42.6 | 50.5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이하 동일)
 주 : 무응답자는 0.4%(4명)

○ (특징2)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가 8월에 5.0%나 상승하여, 지수물가(소비자물가) 상승률 1.2%보다 4배나 높게 나타남²⁾³⁾

-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통계청은 8월 달 소비자물가가 1.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귀하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몇 % 상승한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평균 체감물가는 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특징3) 적자가구의 체감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고, 소득수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가계수지별 : 가계지출이 가계소득보다 많은 적자가구는 8월에 체감물가가 평균 5.4% 상승. 흑자가구(소득>지출)의 4.8%, 균형가구(소득=지출)의 4.8%보다 높음
 · 특히 적자가구 중 저소득층(가계소득 200만원 미만)은 5.9%, 고령층(50대 이상)은 6.1%로 체감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은 수준
 · 절약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적자가구의 경우, 생활비 부족으로 체감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소득수준별 : 소득수준별 체감물가 상승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4.9%, 200~400만원 미만은 5.1%, 400~600만원 미만은 4.9%, 600만원 이상은 4.8%로 비슷한 수준
 ·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체감물가도 높은 이유는, 소득수준에 맞춰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

< 가계수지별·소득수준별 체감물가 >

| 가계수지별 | 평균 체감물가 | 소득수준별 | 평균 체감물가 (%) |
|-------------|---------|--------------|-------------|
| 적자가구(소득<지출) | 5.4 | 200만원 미만 | 4.9 |
| 흑자가구(소득>지출) | 4.8 | 200~400만원 미만 | 5.1 |
| 균형가구(소득=지출) | 4.8 | 400~600만원 미만 | 4.9 |
| | | 600만원 이상 | 4.8 |
| 전체 | 5.0 | | |

주 : 소득은 가계소득을, 지출은 가계지출을 뜻함

- 2) 구체적인 질문지 내용은 <별첨1> 닷내립 효과 참조
- 3) 1,013개 표본 중 가외치(outlier) 16개를 제외한 997개 표본의 평균임. 몇몇 소비자의 체감물가가 턱없이 높을 경우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 가외치를 제거한 것임. 통상적인 통계기법대로, 평균보다 표준편차의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가외치(outlier)를 제거하였음

○ (특징4) 자영업자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높은 반면, 전업주부는 낮은 편

- **직업별** : 자영업자의 체감물가는 5.2%나 상승한 반면, 전업주부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4.8%를 기록
 - 음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재료비가 상승한 반면 매출이 늘지 않으면서 체감물가가 높게 느껴지는 것으로 분석됨
 - 전업주부의 경우 식료품 등을 자주 구입하므로 체감물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물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 지수물가와의 괴리가 오히려 작은 것으로 판단됨
- **성별** : 주부를 포함한 여성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4.8%로 남성의 5.1%보다 낮음
 - 여성 중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각각 4.8%, 4.9%로 비슷

< 성별·직업별 체감물가 >

| 직업별 | 평균 체감물가 | 성별 | 평균 체감물가 (%) |
|-------|---------|------|-------------|
| 임금근로자 | 5.0 | 남성 | 5.1 |
| 자영업자 | 5.2 | 여성 | 4.8 |
| 전업주부 | 4.8 | | 전업주부 |
| 기타 | 4.5 | 직장여성 | 4.9 |
| 전체 | 5.0 | | |

주 : 기타에는 학생, 무직 등 포함

○ (특징5) 연령이 높을수록 체감물가도 상승

- **연령별** : 20대~30대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각각 4.4%, 4.8%인 반면, 40대는 5.3%, 50대 이상은 5.2%를 기록
 - 40~50대의 경우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많아 체감물가가 높게 형성되고, 60대 이상 고령층은 소득이 적어 체감물가가 높게 느껴지는 것으로 분석됨

○ (특징6) 서울과 대전·충청 지역의 체감물가 상승률이 높고, 광주·전라 지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 서울과 대전·충청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각각 5.3%, 5.4%로 높고, 광주·전라 지역, 인천·경기 지역은 각각 4.5%, 4.8%로 낮은 수준을 기록

< 연령별·지역별 체감물가 >

| 연령별 | 평균 체감물가 | 지역별 | 평균 체감물가 |
|--------|---------|----------|---------|
| 20대 이하 | 4.4 | 서울 | 5.3 |
| 30대 | 4.8 | 인천·경기 | 4.8 |
| 40대 | 5.3 | 대전·충청 | 5.4 |
| 50대 이상 | 5.2 | 광주·전라 | 4.5 |
| | | 부산·울산·경남 | 5.0 |
| | | 대구·경북 | 4.9 |
| 전체 | 5.0 | | |

○ (특징7) 소비자들은 식료품과 승용차 연료, 전기·가스·난방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느끼고 있음

- 가격 급등 품목 : “8월 달에, 다음 중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품목은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과반은 ‘식료품’이라고 답함
 - ‘식료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1.4%로 과반을 차지하고, ‘휘발유 등 승용차 연료’는 20.4%, ‘전기·가스·난방’은 14.6%임
 - 반면 ‘대중교통비’는 응답자의 2.1%, ‘학교 등록금 및 사교육’은 3.5%, ‘외식’은 3.6%, 전월세는 4.4%에 불과

<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급등 품목 >

| 구분 |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품목 | | | | | | |
|--------|-----------------|--------|---------|------|------|------|--------|
| | 식료품 | 승용차 연료 | 전기 가스난방 | 전월세 | 외식비 | 교육비 | 대중 교통비 |
| 응답자 비중 | 51.4% | 20.4% | 14.6% | 4.4% | 3.6% | 3.5% | 2.1% |

2) 체감물가가 생계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 (특징8) 적자가구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물가로 인한 생계부담 및 소비 위축이 심각한 수준

- 생계부담 : “귀댁은 최근의 물가 상황 때문에 생계부담을 느끼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79.0%가 생계부담을 느낀다고 답변
 - ‘매우 크게 느끼고 있다’는 21.0%, ‘생계부담을 느끼는 편이다’는 58.0%임
 - 반면 ‘생계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1.6%, ‘생계부담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는 17.9%에 불과
 - 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생계부담이 적으나, 여전히 70%에 육박
 - 적자가구의 생계부담이 매우 크나, 흑자가구 및 균형가구도 생계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 소비지출 : 응답자의 70% 이상이 물가 때문에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음
 - “귀댁은 최근의 물가 상황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71.6%가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답변
- 소비축소 품목 : 외식비 33.4%, 식료품비 28.3%, 의류비 16.5%, 레저·여가·문화비 13.5%, 내구재 4.1%, 교통·통신비 3.2%, 교육비 1.1% 순임

< 물가가 생계부담 및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

(%)

| 구분 | 생계부담 | | 소지비출 | |
|--------------|-------|---------|------|------|
| | 느끼는 편 | 느끼지 않는편 | 줄인다 | 아니다 |
| 200만원 미만 | 84.4 | 13.3 | 78.1 | 21.9 |
| 200~400만원 미만 | 84.9 | 13.6 | 75.0 | 25.0 |
| 400~600만원 미만 | 73.4 | 25.2 | 68.8 | 31.2 |
| 600만원 이상 | 68.2 | 31.8 | 60.5 | 39.5 |
| 적자가구(소득<지출) | 88.7 | 8.8 | 82.1 | 17.9 |
| 흑자가구(소득>지출) | 69.2 | 29.8 | 62.7 | 37.3 |
| 균형가구(소득=지출) | 79.3 | 19.6 | 70.7 | 29.3 |
| 전체 | 79.0 | 19.5 | 71.6 | 28.4 |

3) 체감경기와 정부 대책

○ (특징9) 실제 경기는 디플레이션의 특성을 보이는 반면, 국민의 체감 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특성을 띠고 있음

- 실제 경기 : 대내외 경제 연건이 악화되면서 실제 경기는 GDP 증가율이 떨어지고 물가상승률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특성을 보임
 - 유로존 위기 지속, 미국의 미약한 회복세, 중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세로 대외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위축, 미래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부진으로 내수경기도 회복세 미약
- 체감 경기 : 하지만 국민들은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체감물가가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스태그플레이션 양상)
 - “귀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다음 중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응답이 84.5%로 대다수를 차지
 - 반면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낮다’는 응답은 5.4%에 머물러, 체감 경기와 실제 경기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남

○ (특징10) 국민들은 체감물가를 낮추는 정부 대책으로 유통구조 효율화를 선호하고, 체감물가지수를 개발해야 한다는 비중도 높게 나타남

- 정부 대책 :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식료품 등의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정부 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응답이 46.5%를 차지
 - ‘현실 물가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체감물가지수를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은 26.7%, ‘식료품 등의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관리해야 한다’는 20.5%를 차지
 - 반면 ‘기준금리를 올려 통화량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6.0%에 그침

< 최근 경기 및 정부대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

| 체감 경기 | 응답자비중 | 정부대책 | 응답자비중 (%) |
|--------------|-------|-------------|-----------|
| 경기침체+높은물가상승률 | 84.5 | 기준금리 인상 | 6.0 |
| 경기침체+낮은물가상승률 | 5.4 | 식료품가격 품목별관리 | 20.5 |
| 경기회복+높은물가상승률 | 9.0 | 유통구조 효율화 | 46.5 |
| 경기회복+낮은물가상승률 | 0.7 | 체감물가지수 개발 | 26.7 |

Ⅲ. 시사점과 정책 과제

- (시사점)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는 실제 경기와 체감 경기의 괴리로 이어져 정부의 정책수단을 제약할 가능성 존재
 - 체감 경기 악화 : 국민의 84.5%는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높다고 답해 스태그플레이션의 특성을 띠고 있음
 - 하지만 실제 경기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GDP 증가율이 떨어지고 물가상승률도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통화당국의 통화량 확대정책이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지수물가의 안정으로 통화공급 확대를 통한 총수요 확대정책 여지가 존재
 - 하지만 통화공급 확대로 물가가 상승하면, 적자가구를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상승하면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우려
 - 그러므로 정책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소비 위축 : 또한 체감물가 상승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률이 5.0%에 이르고, 물가 때문에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응답자도 71.6%에 달함
 - 소비자의 높은 체감물가를 방치할 경우, 소비심리가 악화되면서 정부의 다양한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짐
 - 소비자들은 소비지출을 결정함에 있어 통계청의 지수물가보다는 스스로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체감물가 악화는 곧 소비심리 위축을 뜻하며, 특히 저소득가구와 적자가구를 중심으로 생계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위축될 우려
 - 따라서 체감물가의 수준 및 추이를 계층별로 정확히 파악하고,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정책 과제)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해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체감물가 수준과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체감물가지수를 개발

-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 : 농수산물 가격 안정은 체감물가를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 직판장 확충 및 인터넷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산물의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 도모
 - 산지-운송-소비자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산물 가격 상승폭을 최소화

- **정부비축 시스템 보완** : 정부비축 시스템을 보완하고, 수급 변동성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재고 규모를 늘림으로써 수급 안정화 유도
 - 농산물 등의 현물 비축 물량 증가는 보관비용 증가도 발생하므로 선물시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

- **체감물가지수 개발** :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 수준과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체감물가지수를 개발하여 통계청의 생활물가지수를 보완
 - 통계청의 생활물가지수는 자주 구입하는 142개 품목의 '물가변동'만을 반영
 - 체감물가는 물가변동뿐만 아니라 물가수준, 소득수준, 가계수지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시급
 - 체감물가는 특히 계층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계청이 계층별 체감물가를 파악해 발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물가지수 개선**
 - 신선식품 등 가격 등락이 심한 품목의 조사 횟수 확대
 - 백화점, 대형마트, 할인점, 재래시장 등에 따라 물가상승폭이 다르고 국내산과 수입품도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각각의 물가지수 발표 등
 - 기준년도를 좀 더 자주 변경하여 IT 기술혁신에 따른 괴리 현상 완화

- **추석 후 물가상승 요인을 적절히 관리**
 - 옥수수, 대두, 밀의 국제가격이 6~9월에 30% 이상 급등하면서 추석 이후에 밀가루, 전분 등의 식료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비축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할당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
 - 경기 둔화세를 고려하여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한꺼번에 오르지 않도록 인상 시점도 분산
 - 곡물가격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공산품 및 서비스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것을 미시적으로 관리하고, 가격 담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시행

경제연구본부 이준협 연구위원 (02-2072-6219, sododuk1@hri.co.kr)

<별첨1> 닳내림 효과 (anchoring effect)

○ (정의) 배가 어느 지점에 닳을 내리면 그 이상 움직이지 못하듯이, 인간의 사고가 하나의 이미지나 기억에 박혀 버려 어떤 판단도 그 영향을 받아 그 주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

- 어떤 사항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초기에 제시된 기준에 영향을 받아 판단을 내리는 현상

·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시된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준점을 토대로 약간의 조정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그런 조정과정이 불완전하므로 최초 기준점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음

○ (두 겹의 닳내림 효과) 체감물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천차만별이고 표준편차가 너무도 커서, 닳내림 효과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두 겹의 닳내림 효과를 설정하였음

- 질문지 구성

Q.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통계청은 8월 달 소비자물가가 1.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귀하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몇 % 상승한 것 같습니까?

- ① 1% 하락 ② 0%로 불변 ③ 1% 상승 ④ 2% 상승 ⑤ 3% 상승 ⑥ 4% 상승
⑦ 5% 상승 ⑧ 6% 상승 ⑨ 7% 상승 ⑩ 8% 상승 ⑪ 기타 몇()%

- 1차 닳내림 효과 :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를 미리 제시함으로써 응답자의 체감물가 상승률이 턱없이 높지 않도록 조정하고 표준편차를 줄임

- 2차 닳내림 효과 : 보기를 -1%~8%로 제시함으로써 응답자의 체감물가 상승률이 턱없이 높지 않도록 조정하고 표준편차를 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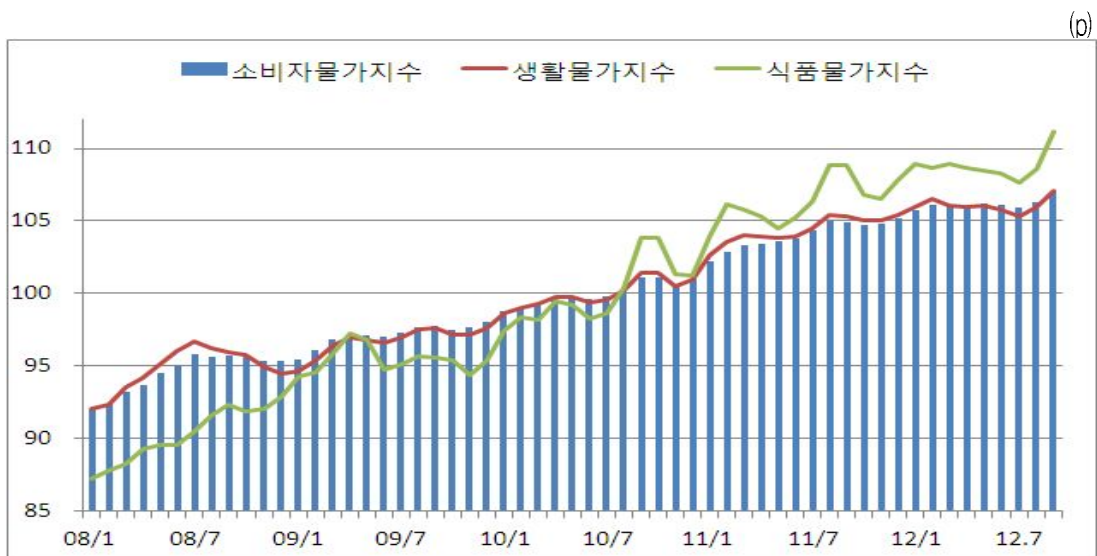
○ 두 겹의 닳내림 효과에도 불구하고 체감물가 상승률이 지수물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그만큼 소비자의 물가 불안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영

<별첨2> 체감물가와 지수물가의 괴리 배경

○ (기저효과) 체감물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식품물가가 2011년에 급등하면서, 2012년에도 식품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낮게 측정됨

- 식품물가지수(2010년=100p)는 2011년에 평균 106.3p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2012년(1~8월)에도 평균 108.5p로 고공행진 지속
 - 하지만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11년 6.3%에서 2012년(1~8월)에는 2.1%로 크게 떨어짐
- 특히 돼지고기, 고등어, 오징어, 수박, 설탕 등의 기저효과가 상당
 - 돼지고기 가격지수는 2011년 128.1p, 2012년(1~8월) 114.5p로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나, 연간 증가율은 2011년 28.1%에서 2012년 -10.6%로 급락
 - 오징어도 2011년 129.1p, 2012년 124.6p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연간 증가율은 2011년 29.1%에서 2012년 -3.5%로 하락
 - 고등어의 가격지수는 2011~2012년 각각 125.9p, 116.2p이고, 수박은 125.0p, 127.0p, 설탕은 122.7p, 127.6p임

< 물가지수 추이 >



자료 : 통계청

<참고> 기준년도의 역설 : 신선식품에서 괴리가 큰 이유

- 가격지수 재설정 :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481개 품목의 가격지수는 모두 2010년에 100으로 재설정되었음
 - 기준시점(2010년)에 가격수준이 높은 품목은 고물가 상태에서 100으로 재설정되기 때문에, 2011~2012년 가격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됨
 - 반면 기준시점에 가격수준이 낮은 품목은 저물가 상태에서 100으로 재설정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됨

- 사례 : 신선식품에서 괴리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
 - 2010년 신선식품 가격은 2009년보다 21.7%나 급등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 었음
 - 기준년도가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바뀌면서, 신선식품의 가격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가격지수가 100으로 재설정됨
 - 신선식품물가 상승률은 2011년 7.1%, 2012년 4.3%로 2010년의 21.7%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실제 신선식품 가격은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음
 - 이 때문에 지수물가 상승률은 낮은 반면 체감물가 상승률은 매우 높은 것임

- 전망 : 2015년까지 신선식품의 지수물가와 체감물가 괴리는 지속될 전망
 - 2015년이나 기준년도가 재설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신선식품 가격이 매우 비쌌에도 불구하고 신선식품물가 상승률은 낮게 측정될 것임

○ (가계수지 효과) 적자가구가 흑자가구보다 체감물가 상승률이 더 높지만, 지수물가는 가계수지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괴리 발생

- 가계소득보다 가계지출이 더 많은 적자가구의 경우, 생계부담이 커서 체감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적자가구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5.4%로 흑자가구의 4.8%보다 0.6%p 더 높게 나타남
 - 특히 적자가구 중 저소득층(가계소득 200만원 미만)은 5.9%, 고령층(50대 이상)은 6.1%로 체감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은 수준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체감물가와 지수물가의 괴리가 크며, 소득수준별 체감물가 상승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4.9%, 200~400만원 미만은 5.1%, 400~600만원 미만은 4.9%, 600만원 이상은 4.8%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수물가(소비자물가) 상승률 1.2%와 큰 괴리를 보임
 -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체감물가도 높은 이유는, 소득수준에 맞춰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중산층도 생활비를 아껴 저축을 하는 형편이므로 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나 생활물가는 소비자의 가계수지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체감물가와 괴리가 발생
 - 특히 최근처럼 생활물가 조사품목의 가격 상승률이 낮을 경우,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생활물가가 지수물가(소비자물가)보다 더 낮은 상황 발생

< 가계수지별·소득수준별 체감물가 >

| (%) | | | |
|-------------|---------|--------------|---------|
| 가계수지별 | 평균 체감물가 | 소득수준별 | 평균 체감물가 |
| 적자가구(소득<지출) | 5.4 | 200만원 미만 | 4.9 |
| 흑자가구(소득>지출) | 4.8 | 200~400만원 미만 | 5.1 |
| 균형가구(소득≒지출) | 4.8 | 400~600만원 미만 | 4.9 |
| | | 600만원 이상 | 4.8 |
| 전체 | 5.0 | |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1 : 소득은 가계소득을, 지출은 가계지출을 뜻함

○ (심리효과) 물가에 대한 인식의 하방경직성, 비교 시점의 차이, 가격변동과 지출액의 혼동 등 소비자의 심리효과 때문에 체감물가가 높아짐

- 하방경직성: 물가에 대한 인식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하여,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에는 둔감한 반면 가격 상승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
 - 8월에 전년동월대비 가격이 10% 이상 급락한 품목은 호박 등 18가지로, 10% 이상 급등한 품목 14가지보다 더 많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가격 급락 품목보다는 가격 급등 품목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물가보다 체감물가가 더 높게 느껴지는 것임
-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정책 노력이 하방경직성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
 - 학교급식비(-19.1%), 보육시설이용료(-34.0%), 유치원 납입금(-11.1%) 등 정부 정책의 변화로 소비자물가가 0.57%p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
 - 정부정책이 지수물가(소비자물가)를 끌어내리기는 했지만, 물가 인식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체감물가까지 끌어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8월 가격 급등 품목과 급락 품목 >

(% ; 전년동월대비)

| | 식품 | 식품 이외 |
|-------------------|---|---|
| 가격 급등 품목 (14개) | 고춧가루(52.8), 파(49.4), 귤(39.8), 양파(24.2), 미역(24.1), 조개(16.6), 갈치(16.5), 고추장(15.8), 수박(13.6), 소금(12.0), 어묵(10.6) | 하수도료(13.5), 전철료(13.2), 시내버스료(10.3) |
| 가격 급락 품목 (18개) | 호박(-54.6), 무(-46.8), 토마토(-30.9), 상추(-30.5), 배추(-28.9), 풋고추(-27.7), 당근(-27.6), 참외(-20.4), 포도(-16.8), 돼지고기(-16.1), 달걀(-15.3), 오이(-15.3) 명태(-15.0), 고등어(-11.9) | 보육시설이용료(-34.0), 학교급식비(-19.1), 조제약(-13.5), 유치원납입금(-11.1) |

자료 : 통계청

주 : 생활물가 조사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10%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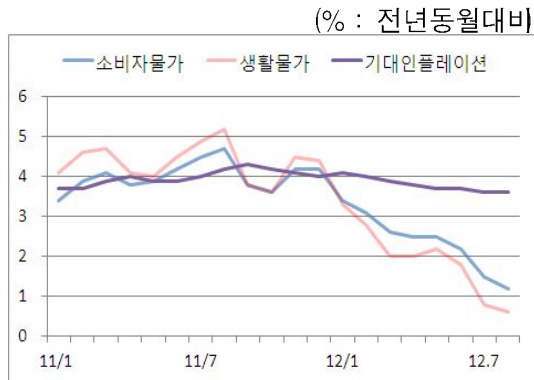
- **비교 시점 차이** :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는 값이 가장 싼 시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 체감물가가 높게 인식됨
 - 반면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는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정해놓고 가격변동을 계산 (예: 전월비, 전년동월비)
 - 2012년 8월 상추의 가격지수는 101.6p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의 61.4p보다 2달 새 65.5%나 상승해 체감물가를 끌어올림

- **가격변동과 지출액 혼동** : 소비자물가는 상품·서비스의 '가격변동'만을 측정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가격변동만이 아닌 '지출액 증가분'까지 물가상승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음
 - 2012년 8월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각각 5.0%, 6.4%, 7.8% 상승
 - 하지만 자녀가 고학력으로 올라갈수록 사교육 시간이 증가하고, 따라서 사교육비 총액은 학원비보다 더 크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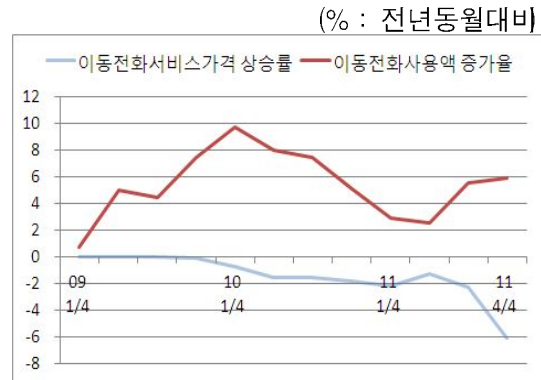
-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및 추석효과) 미래의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불안심리 때문에 소비자들은 현재의 물가 상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 8월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가 각각 1.2%, 0.6% 증가에 그쳤으나, 기대 인플레이션은 3.6%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 향후 물가 상승 요인이 산적해 있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 지속
 - 향후 물가 상승요인 :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식료품가격 상승, 달러 유동성 증가에 따른 원유 등의 원자재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억눌려 있던 공산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 우려 등
 - 미래의 물가 불안 심리가 현재의 체감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소로 작용

 - 특히 소비지출이 불가피한 추석을 전후하여 물가 불안 심리가 체감물가 악화로 전이
 - 추석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추석 체감물가 상승률은 8.2%로 8월의 체감물가 5.0%보다 3.2%p 더 높게 나타남
 - 연이은 가뭄과 태풍으로 소비자들은 과일과 곡물, 생선 등 추석에 필수적인 품목의 가격이 급등하였고, 체감물가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임

< 기대 인플레이션 및 물가상승률 > < 이동전화서비스 가격 및 사용액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자료 : 통계청

○ (기술혁신 효과) IT 등 기술혁신이 빠른 분야에서 고가의 신제품이 끊임 없이 출시되고 있으나, 지수물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해 지수물가가 낮게 측정됨

- 소비자물가는 기준년도(2010년)의 상품묶음을 기초로 가격변동을 산출하므로, 당시에 없던 신형 제품·서비스는 지수물가에 반영되지 않음
- 반면 2010년에 유행하던 구형 제품·서비스는 신형에 밀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수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이동전화 요금) : 소비자가 지불하는 이동전화요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동전화요금 가격지수는 오히려 크게 떨어지고 있음
- 가구당 이동전화요금은 2008년 80,198원에서 2011년 93,902원으로 연평균 5.4%씩 꾸준히 증가
- 반면 이동전화요금 가격지수 증감률은 2008~2011년 각각 -1.8%, 0.0%, -1.4%, -3.0%였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무려 -6.4%나 하락
- 고가의 이동전화서비스가 신규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동전화요금은 상승하였으나, 구식의 이동전화서비스 가격은 크게 하락하면서 지수물가를 끌어내리는 것으로 분석됨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 구분 | 2010년 | | | | | 2011 | | | | | 2012년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E) |
| 미국 | 3.0 | 3.9 | 3.7 | 2.5 | 2.3 | 1.7 | 0.4 | 1.3 | 1.8 | 3.0 | 2.0 |
| 유로 지역 | 1.9 | 0.4 | 1.0 | 0.4 | 0.3 | 1.4 | 0.8 | 0.2 | 0.2 | -0.3 | -0.3 |
| 일본 | 4.4 | 6.1 | 5.2 | 2.3 | -0.6 | -0.9 | -6.8 | -1.5 | 7.0 | -2.3 | 2.4 |
| 중국 | 10.3 | 11.9 | 11.1 | 10.6 | 9.8 | 9.3 | 9.7 | 9.5 | 9.1 | 8.9 | 8.0 |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7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 구분 | 2010년말 | 2011년 | | 2012년 | | | |
|----|------------------|---------|---------|---------|---------|---------|----------|
| | | 6월말 | 12월말 | 9월 28일 | 10월 4일 | 전주비 | |
| 해외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 3.30 | 3.16 | 1.88 | 1.64 | 1.67 | 0.03%p |
| | 엔/달러 | 81.19 | 80.66 | 77.66 | 77.62 | 78.48 | 0.86 ¥ |
| | 달러/유로 | 1.3350 | 1.4492 | 1.2955 | 1.2911 | 1.2922 | 0.0011\$ |
| | 다우존스지수(p) | 11,578 | 12,414 | 12,218 | 13,437 | 13,575 | 138p |
| | 닛케이지수(p) | 10,229 | 9,817 | 8,455 | 8,870 | 8,825 | -45p |
| 국내 | 국고채 3년물 금리(%) | 3.38 | 3.76 | 3.34 | 2.79 | 2.74 | -0.05%p |
| | 원/달러(원) | 1,134.8 | 1,067.7 | 1,151.8 | 1,111.4 | 1,113.8 | 2.4원 |
| | 코스피지수(p) | 2,051.0 | 2,100.7 | 1,825.7 | 1,996.2 | 1,992.7 | -3.5p |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 구분 | 2010년말 | 2011년 | | 2012년 | | | |
|---------|--------|--------|--------|--------|--------|--------|---------|
| | | 6월말 | 12월말 | 9월 28일 | 10월 4일 | 전주비 | |
| 국제 유가 | WTI | 91.40 | 95.18 | 99.22 | 92.10 | 91.64 | -0.46\$ |
| | Dubai | 88.80 | 106.75 | 104.89 | 110.56 | 106.33 | -4.23\$ |
| CRB선물지수 | 332.80 | 338.05 | 305.30 | 309.29 | 310.45 | 1.16p | |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